2016년 지방수탁 9급 행정학 문제 및 해설(이명훈)

<<총평>>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 지방수탁 9급 행정학은 다소 평이한 출제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2~3문제 정도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0번 정부 간 관계(IGR) 모형은 자주 출제되었던 라이트 모형뿐만 아니라 로즈의 모형까지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여서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문제 11번 정책변동모형은 2016년 국가직 9급에 이어 지방수탁 9급에도 연이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하이패스 행정학 기본서와 심화강의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한 번의 관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직 9급 문제와 지방수탁 9급 문제 중 개인적으로 해결이 곤란했던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다음 시험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과거의 것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고 다음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답)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하이패스 행정학 p39)

<<핵심체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구 분	시장실패	정부실패
원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외부성) • 자연독점의 존재 • 불완전 경쟁 • 분배의 불형평 • 정보의 비대칭성 • 경기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성 • 파생적 외부효과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X-비효율성(독점성) • 권력의 편재로 인한 분배의 불형평 • 정보의 부족, 시차의 문제, 지대추구행위

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 욕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 ③ 허츠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④ 애덤스(Adams)는 형평성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답)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은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하향적 퇴행현상’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하이패스 행정학 p518).

<<핵심체크>>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욕구의 5단계와 계층성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애정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 욕구로 구분하고 이들 욕구는 순차적으로 발현되는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룬다고 봄
만족진행모형	인간의 욕구는 우선순위의 계층구조에 따라 하위차원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완전한 충족이 아닌 부분적 충족)되었을 때 다음 단계의 상위차원의 욕구로 나아감.
욕구의 동기유발성	동기로 작용하는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이며, 충족된 욕구는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힘을 상실함.
한계	① 욕구의 하향적 퇴행현상 불고려, ② 욕구의 개인차 불고려, ③ 인간욕구의 유동성 불고려, ④ 두 가지 이상의 욕구의 동시발현 불고려(분절형의 욕구 단계) 등

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답)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합리주의(총체주의) 접근을 적용한 예산제도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745).

<<핵심체크>> 합리주의적 예산결정과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구 분	합리주의(총체주의)	점증주의
인간	전지전능성과 경제적 합리인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존재
강조점	경제원리(과학성)	정치원리(정치성)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미시적 과정	총체적·체계적 분석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거시적 과정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	당파적 상호 조정
기 준	사회후생극대화(파레토 최적)	분배의 형평성
결과	신규사업, 대폭적·체계적 변화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 변화
목표수단분석	가능(목표는 주어진 것)	불가능(목표 조정 가능)
대안고려	모든 대안의 고려(전체적 분석)	한정적 대안만을 고려(부분적 분석)
결정방향	거시적(하향적 결정)	미시적(상향적 결정)
분석수준	총액지향적	세부사업지향적
초 점	체제예산	과정예산
결정방식	체계적·포괄적·분석적 결정	계속적·분할적·분산적 결정
최적화	총체적·체계적 최적화	부분적 최적화
성 격	단힌 예산(집권성)	열린예산(분권성)
관련제도	PPBS, ZBB	PBS, LIBS
성 향	개혁성(쇄신적 예산결정)	보수성(현상유지성향)
이론구성	수리적·계량적·연역적 분석	귀납적 이론 구성
접근	규범적·이상적 접근	실증적 접근

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답) ② 옴부즈만 제도의 원형은 의회소속형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기관 소속형도 존재한다(ㄱ). 옴부즈만은 명백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일탈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통제한다. 따라서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까지 가능하다(ㄷ). - (하이패스 행정학 p224)

- <<오답정리>>
 ㄴ.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옴부즈만 제도

의의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 통제와 사법부 통제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두 • 기원과 발전 : 스웨덴에서 기원하였으나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우리나라 -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 	
특징	구성	직무수행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의회소속이지만 의회로부터 독립
	영역	고발영역의 다양성;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일탈된 모든 행위 - 합법적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적 통제도 가능
	통제	간접적 통제;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
	절차	접근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
	권한	신청에 의한 조사가 주가 되나 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
	기관	헌법기관
	성격	① 옴부즈맨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제도, ②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 ③ 법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답)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갈등과 대립이 많아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854).

<<핵심체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비교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형)	기관대립형(대통령중심제형)
의의	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라는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형태	자치단체의 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는 형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주민자치형 국가에서 채택 •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단체자치형 국가에서 채택 • 집행기관 직선형, 집행기관 간선형, 집행기관 임명형 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의 권한·책임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책임행정 구현 용이 • 의결·집행기관 간 대립·갈등이 적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확보 • 의결·집행기관의 단일화로 결정과 집행의 유기성이 확보되어 지방행정의 신속성·능률성 제고 • 의회의 신중한 심의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 • 전문적인 행정기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 • 단일 지도자를 통한 행정의 종합성 제고 및 행정책임 소재 분명 • 행정부서 간 분과주의 배제 극복 • 집행기관 직선형의 경우 주민통제가 용이하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가능하며, 국민의 대응성이 증진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제와 균형 곤란으로 민주정치 훼손 • 행정의 전문성 저해 • 단일의 지도자가 없어서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약화 및 책임소재 불분명 •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 공무원의 재량범위 협소 • 위원회형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 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 형성에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갈등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대립시 지방행정의 안정성·능률성 저해 •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로 책임행정 저해 • 시장에게로 의사결정권의 집중으로 신중한 의사결정 저해 • 집행기관 직선형의 경우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정책 야기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 ④ 지대추구행위

(답) ① 설문은 규제피라미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규제피라미드 현상을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라고도 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255).

<<핵심체크>> 규제의 효과

법규주의	피규제자의 다양성, 규제집행 현장의 불확실성, 규제 상황의 동태성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법령대로만 적용하려는 현상	
규제의 피라미드	규제가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Tar-Baby effect)	
규제의 재분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 : 조세처럼 국민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 • 규제와 교차보조 : 가격규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 수행 • 규제와 지대 : 지대(규제)를 얻기 위한 각종 로비활동 등으로 사회적 낭비 초래 • 규제와 포획 : 규제기관이 기업의 포로가 되어 소비자의 희생으로 기업의 이익증진에 기여 	
규제의 역설	의의	정부에 의해 형성된 규제가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규제의 목적과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발생하는 현상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된다. •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한다. •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해가 된다. • 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든다.

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답) ①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 비(B/C ratio)는 모두 할인율을 통해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하이패스 행정학 p325).

<<핵심체크>>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	계산방법	한계
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현재가치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NPV > 0이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칼도(Kaldo)- Hicks(Hicks)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정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님
편익비용비 (B/C ratio : 수익률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익비용비 = (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ratio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 부(負)의 편익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편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짐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현재가치(NPV) = 0, B/C ratio =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대안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을 모르는 경우에 이용됨 IRR > 기준 할인율일 때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IRR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이 상이한 사업 간 비교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해를 지님
자본회수기간 (비용변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회수기간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자본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재정력이 부족하여 자금의 회수가 중요할 때 적용되는 기준 	
적용	NPV가 다른 기준(B/C ratio, IRR)보다 오류가 적어 일차적 기준임	

<<핵심체크>>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구분	비용편익분석(B/C)	비용효과분석(E/C)
측정단위	비용과 편익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	비용은 화폐단위, 편익은 측정 가능한 단위
성격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중점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자원활용의 효율성 분석)
유형분석	가변비용과 가변효과의 분석에 사용	고정비용과 고정효과의 분석에 사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사업 간 비교 가능 비용과 편익의 직접적 비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량화가 불필요하여 사용 간편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 분석 용이 공공부문에 보다 적합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익의 계량화 곤란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 분석 곤란 시장가치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사업 간에 비교 불가능 비용과 편익의 직접적 비교 불가능

8.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답) ① 설문은 델파이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316).

<<핵심체크>> 델파이 분석

의의	익명성이 유지되는 전문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판단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방법
절차	문제의 명확화 - 참여자의 선정 - 질문지 작성 - 1차 응답의 결과 분석(통계처리) - 후속 질문지의 개발(1차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요약된 정보 제공) - 응답 및 질문의 3~4회 반복 -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특징	익명성, 통계처리(중앙경향과 분산도 중시), 통제된 환류, 반복(환류과정의 반복), 유도된 합의 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 도출 • 토론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구성원간의 마찰이나 감정대립, 다수의견의 횡포 방지 • 익명성이 유지되어 외부적 영향력으로 인한 결론의 왜곡을 방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도출 •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변수 고려와 지식교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 통제된 환류과정의 반복으로 의견 수정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예측에 대한 위험 감각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성으로 인하여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 야기 • 설문지의 질문구성에 의한 응답자 답변의 조작가능성 • 비판기회의 결여로 아이디어 창출 곤란 • 동원된 전문가들의 역량 및 대표성의 문제 • 합의 유도로 인한 소수의견 묵살 가능성 • 응답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과학성 결여 •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개입으로 객관성 결여

9.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측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답) ③ 로즈(Rhodes)의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측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호의존관계를 이루고 있다(ㄱ).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ㄷ). - (하이패스 행정학 p917)

<<오답정리>>
 ㄴ. 로즈(Rhodes)의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원의 교환 과정으로 인해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지방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지방정부의 권위가 계층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독립적이다.

10.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 ① 쓰레기통 모형
-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답) ④ 설문은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317).

<<핵심체크>> 정책변동모형

정책흐름모형(Kin don ; 전통적 정책변동모형)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지지연합모형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념 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특히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Hall)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
단절균형모형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협착(제도의 정체상태)을 강조하며, 정책변동(제도변화)은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강력한 외부적 충격(중요한 분기점)에 의해 단절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본다.

11.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구조라 한다.
- ②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 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답) 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고층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계층제와 통솔범위는 역관계). - (하이패스 행정학 p423)

<<핵심체크>> 계층제

계층제	의의	조직 내의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 조직단위 간 지휘·명령·복종 관계를 확립하는 것(직원·계장·과장·국장·장관)
	필요성	통솔범위의 한계
	하위원리	일치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명령계통의 원리, 구성원 동일체의 원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제와 통솔범위의 관계 : 역관계 • 조직의 대규모화, 전문화, 업무의 다양화, 구성원 수의 증가는 계층의 수와 정비례 관계를 지님 • 계선조직은 계층제 형태를, 참모조직은 계층제 형태를 띠지 않음 •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비정형적인 업무를, 낮을수록 정형적 업무를 담당

12.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답) ① 자율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반면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타율적·수동적 책임을 의미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216).

<<핵심체크>> 자율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

자율적 책임성(적극적 책임)	제도적 책임성(소극적 책임)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능동적 책임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타율적·수동적 책임
대응성 개념에 입각한 행정책임	파이너(Finer)의 행정책임과 연계
문책자의 부재 및 내재화	문책자의 존재 및 외재화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는 별개	절차의 준수 중시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 없음	공식적·제도적 통제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없음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제재수단의 부재	제재수단의 존재

<<핵심체크>>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와 두차원

두 측면	소극적 측면	부정부패 등 부정적 행위를 하지 않는 측면 -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적극적 측면	바람직한 가치(공익성·책임성 등)를 추구하는 측면 - 공무원윤리헌장 등
철학적 기초	결과주의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적발과 처벌(통제) 강조 -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의무론	공무원의 부도덕한 동기실현의 사전제어(안내나 관리) 강조 - '더러운 손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 행동강령 등

독립변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정책수단) - 결정자가 조작 가능한 변수(정책변수), 조작 불가능한 변수(환경변수)로 구분됨
종속변수	원인변수에 의한 결과(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정책목표)
허위변수	두 변수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혼란변수	두 변수 간에 일부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변수
억제변수	두 변수 간에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제3의 변수
왜곡변수	두 변수 간에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
매개변수	두 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구성변수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변수
선행변수	독립변수에 앞서서 독립변수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답) ① 공공선택론의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을 전제로 하는 경쟁시장의 논리는 역사적으로 누적·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하이패스 행정학 p129).

<<핵심체크>> 공공선택론

의의	비시장적 의사결정(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의 행태, 정당정치, 관료 행태, 이익집단의 연구 등)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정치경제학적 접근,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
연구 방법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환원주의적 시각, 미시적 연구) ② 연역적 연구
기본 가정	① 인간관 - 합리적 경제인관(이기적인 존재) ② 공공서비스 - 생산자; 정치인(득표극대화-교환으로써의 정치) 및 관료(예산극대화), 소비자; 시민 및 이익집단(무임승차) ③ 제도적 장치(유인설계장치)의 마련 중시
함의	① 정부실패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② 시민 선호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구조와 방법 연구 ③ 경쟁체제(다원조직제) 확립을 통해 시민 선호와 대응성 향상 ④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추구 ⑤ 생산의 비용 극소화와 소비의 편익 극대화 추구(파레토 최적 실현) ⑥ 민주적 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중시 ⑦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적정 공급영역 설정
한계	①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심리적 요소를 불고려하는 경제학적 가정의 편협성 ② 시장원리의 지나친 신봉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형평성 불고려) ③ 개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수적 접근(현상유지와 균형이론을 전제로 하는 경쟁시장 논리) ④ 관할권의 중첩과 다원조직제로 인한 조정비용 증가 가능성 ⑤ 현실적합성이 낮은 처방

16.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답) ④ 고위공무원은 부처의 경계 없이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 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 (하이패스 행정학 p612)

17.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②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은 높다.

(답) ③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의 객관성이 확보되며, 송수신자가 분명하여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다(하이패스 행정학 p553).

<<핵심체크>> 의사전달

	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 객관성 확보 • 송수자가 분명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하며, 조정과 통제 용이 • 상관의 권위 유지 • 자료 보전 용이 • 정책결정에 활용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고 적응성이 강함 •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 • 개인적 욕구 충족 • 공식적 의사전달 보완 • 관리자에 대한 조언 역할 수행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에 의거하므로 의사전달의 신속성이 없고 형식화 초래 • 배후사정 전달 곤란 • 변동하는 사태에 신속한 적응 곤란 • 다양한 활동의 포괄적 표현 곤란 • 기밀유지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소재 불분명 •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가능성 • 공식적 의사소통기능의 마비 야기 • 상관의 권위 손상 우려 • 조정과 통제 곤란 • 의사결정에 활용 곤란

1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에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답) ③ 미국의 인사관리처(대통령 직속)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수상 직속)은 모두 비독립단독형의 중앙인사기관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616).

<<핵심체크>> 중앙인사기관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예	미국(과거 연방인사위원회)		한국(현재 인사혁신처), 미국(현재 인사관리처), 영국(현재 공무원장관실) 등	
장점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관주의 압력 배제 • 행정부패와 무질서 방지 •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 	비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반의 강력한 정책추진 • 책임한계 명확 • 인사통제 용이
	집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 • 인사행정의 통일성 확보 • 통합적인 조정 및 인사통제 	분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인사행정 • 인사행정의 융통성
	합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행정의 신중성·공정성 확보 • 인사행정의 중립성 확보 •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 	단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소재 명확 • 신속한 의사결정
단점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행정의 막료기능적 성격과 충돌 • 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 곤란 • 행정수반의 강력한 정책추진 곤란 	비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행정의 정실화 우려 • 인사권자의 독선적·자의적 결정 •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곤란
	집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 기관장의 사기 저하 • 적극적 인사행정의 어려움 • 인사행정의 경직화 	분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행정의 통일성 확보 곤란 • 통합적인 조정 곤란
	합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소재 불명확 • 신속한 결정의 어려움 • 타협적 의사결정 • 인사행정의 전문성 확보 곤란 	단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행정의 신중성·중립성 저해 • 인사행정의 계속성·연속성 저해

19.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 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 유익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답) ②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 분류로 정부 활동 파악이 곤란하여 정부 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이 곤란하다(하이패스 행정학 p752).

<<핵심체크>> 품목별예산제도

개념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통제중심 예산)
발달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Taft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1920년대 연방 정부에 도입
편성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물건비(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등으로 편성되며, 우리나라 예산편성과목 중 목(目)에 해당
특징	① 통제지향적 예산, ② 투입 중심 예산, ③ 점증주의적 예산, ④ 상향적·미시적 예산, ⑤ 다른 예산제도와 병용되어 활용, ⑥ 통제책임의 집중화
장점	① 재정민주주의 확립, ② 회계책임의 명확화(관료통제 용이), ③ 편성의 능률성(간편한 예산편성), ④ 자원배분시 적은 마찰과 갈등(예산 삭감시 이익집단의 저항이 적음), ⑤ 인사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⑥ 비능률적 지출이나 초과지출 통제 용이, ⑦ 지출항목의 일목요연성, ⑧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제공
단점	①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결여, ② 정부활동 파악 곤란, ③ 정책의 우선순위 파악 곤란, ④ 사업의 목표 및 성과 파악 곤란, ⑤ 동조과잉과 번문옥례 야기, ⑥ 자원낭비 우려, ⑦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곤란, ⑧ 부서 간의 상황차이 무시, ⑨ 신규 사업 창안 곤란, ⑩ 계획과 예산의 연계 미흡

20.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답) ④ 주민소환투표대상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하이패스 행정학 p912).

<<핵심체크>> 주민소환

의의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기타 주요 공직자의 해직 등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목적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 공약불이행, 독단이나 횡포 등 다양한 이유로부터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주민은 그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투표대상	당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단, 비례대표의회의원은 제외), 교육감	
남용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개시 1년 이내, 임기만료일 1년 미만, 해당 공직자의 주민소환투표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없음.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특정지역에 의한 주민소환 남용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권한정지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확정 및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불복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